

수능 ‘AI 안경’ 단속 고삐 죄다… 판별책임·사전예방은 과제

교육부, 시험장별 판별 인력 배치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 → 3년 추진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교원 82% “스마트안경 식별 어려워”
전교조, 책임 명확화 등 강화 촉구

올해 수능부터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담 인력이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된다. 교육부가 전담 인력 투입과 함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개입 시점과 최종 판단 주체 등 감독교사의 판단·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한다.

현장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감독관의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한다. 보험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교육위 국정 감사에 등장한 AI 스마트 안경.

/뉴시스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간주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고발·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1년인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제재 강화 조치는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도 검토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 배치만으로 현장의 판별 부담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

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64.4%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48.0%,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9%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대책에 대해 전담 인력 배치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면서도, 일반 감독관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와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확대만으로는 교사가 민원이나 소송에 직접 대응하면서 겪는 부담까지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서

는 교육당국이 소송 대응을 주도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규정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험장 입실 단계부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탐지 기술·장비 도입을 촉구했다.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 기준과 불이익도 수험생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도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고양시의 고등학교 3학년 강 모군은 “부정행위가 나오면 시험장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올해 1학기 서울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관련 사례 2건이 확인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2028 대입, 내신만큼 중요한 ‘권장과목’ 선택

주요 대학 학종 선발 70%에 적용
의학계열 미적분Ⅱ·자연계 수학 중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첫 세대가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에는 대학별 권장과목이 주요 입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학들이 전공과 연계된 과목 이수 여부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하면서, 내신 성적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해 공부했는지도 중요해지고 있다. 28일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는 2028학년도 권장과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장과목은 학과별 전공 특성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해 이수를 권하는 과목이다. 필수 이수 과목과 달리 권장과목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과목 선택이 전공 관심과 학업 준비도를 판단하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상위 20개 대학 중 권장과목을 발표한 대학은 15곳이다. 이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 1만4611명 중 권장과목 지정 모집 단위의 선발은 1만148명(69.5%)이다. 전체 1030개 모집 단위 중 567개(55%)도 권장과목을 제시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권장과목을 두지 않았고, 세종대·한국외대·홍익대는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주요 대학 학종의 약 70%를 권장과목이 적용되는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는 만큼,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학종 전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계열별로 보면 서울 주요 의학계열 대학 중 권장과목을 지정한 11곳은 모두 수학에서 미적분Ⅱ를 요구했다. 과학은 2학년 과목인 생명과학과 화학을 각각 9곳이 지정했다. 과학 일반선택 과목을 핵심과

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생명과학이 경희대·서울대·동국대·인하대 등 4곳, 화학이 경희대·서울대·동국대 등 3곳이다. 물리학과 지구과학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없었다.

자연계열은 수학 과목 선택이 핵심이다. 권장과목 모집 단위 가운데 미적분Ⅱ를 권장한 곳은 341개, 기하는 239개로 집계됐다. 일반선택 과목인 대수(157개), 미적분Ⅰ(165개), 확률과통계(158개)보다 지정 규모가 컸다.

인문계열은 종합전형 498개 모집 단위 중 170곳이 권장과목을 지정했다. 이들의 선발 인원은 2519명으로 전체(7760명)의 32.5%다. 그룹별 지정 비율은 무전공 46.9%, 상경 36.7%, 사회·교육 32.4%, 인문·어문 28.3% 순이다.

내년 대입에서는 과목 선택이 진학 전략의 일부가 된다.

/김수정 기자

대학 온라인 강좌 늘고, 기숙사 수용률 하락

4년제 대학 공개강좌 12.9% 증가
기숙사 수용률 21.7%… 0.5%p ↓

대학의 교육·생활 여건이 지표별로 엇갈렸다. 4년제 대학은 온라인 공개강좌와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늘었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하락했다. 전문대학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줄고,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 부담금 부담률도 전년보다 낮아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 등 316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대학 강의가 늘었지만, 증가세는 수도권에 더 컸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공개강좌는 2805개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1496개로 18.4% 늘어 비수도권 대학의 증가율 7.2%를 웃돌았다.

학습 자료 확보를 위한 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15만7697원으로 3.4% 증가했다. 국·공립대는 21만3210원, 사립대는 14만7원으로 각각 5.4%, 2.3% 늘었다.

반면 올해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전년보다 0.5%p포인트 하락했다.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4만4730명으로 늘었지만, 재학생 증가와 1인실 확

대·다인실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은 17.3%로 비수도권 대학의 25.2%보다 낮았다. 기숙사 수용 인원이 늘었어도 전체 재학생 대비 수용 여력은 줄었으며, 수도권 대학의 주거 지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2만4173원으로 3.2% 감소했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5.5% 줄어 수도권 전문대학의 감소율 0.6%보다 컸다.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당 자료 구입 지출이 줄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컸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4년제 대학에서 교직원 82.9%, 재학생 60.2%로 상승했지만, 전문대학에서는 각각 86.8%, 69.4%로 소폭 하락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지표도 악화했다.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2%로 전년(100.5%)보다 4.3%p 하락해 100% 아래로 내려갔다. 재산 보유액은 늘었지만 확보 기준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재산이 기준에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680억원 가운데 실제 부담액은 3614억원에 그쳤다.

/김수정 기자

한양사이버대 ‘하이온’, 韓 캐릭터 어워즈 대상

대학 브랜딩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학과 소개·홍보 콘텐츠 등에 활용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공식 캐릭터 ‘하이온’이 대학 브랜딩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하이온’이 산업 분야 대표 캐릭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온은 한양대의 상징인 사자를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다. 이름은 ‘LION’의 어감에 한양(HY)과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ON’을 더해 지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이어지는 대학이라는 교육 방향을 담았다.



‘2026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시상식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김학민 미디어전략실장(오른쪽)이 시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캐릭터는 학과별 전공 소개 콘텐츠에 활용하고 있다. 건축도시공학과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교육공학과,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등은 전공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 이미지를 제작해 학과와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표정과 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한 이미지에 더해 3차원(3D) 콘텐츠도 선보였다.

이모티콘과 배경화면, 카드뉴스, 학사 안내 콘텐츠에도 적용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등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인형, 열쇠고리 등 기념품, 행사 포토존에도 배치해 오프라인 접점을 넓히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앞으로 학과 소개와 입학 안내, 학습 응원 콘텐츠 등에 하이온을 활용하고 이모티콘과 기념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